

[별첨 2] 12대 기후에너지 정책 대한 정당별 답변 결과 및 회신 내용

공약 의제	국민의힘	더불어 민주당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①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RE100 활성화	무응답	찬성	찬성 (조건부)	무응답	찬성	찬성
② 기후적응 인프라 예산 대폭 확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③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		반대	찬성		찬성	찬성
④ ‘에너지 복지 예산’ 3배로 확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		찬성	찬성 (조건부)		반대	찬성
⑥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⑦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찬성	찬성 (조건부)		보류	찬성
⑧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찬성	찬성 (조건부)		찬성	찬성
⑨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보급 목표 재상향		찬성	찬성 (조건부)		반대 (일부)	찬성
⑩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⑪ 한국형 IRA 법안 제정		찬성	찬성 (조건부)		찬성 (부분)	찬성
⑫ 배출권거래제 강화 또는 탄소세 도입		찬성	찬성 (조건부)		반대 (일부)	찬성

[민주당]

공약 의제	제안 내용 및 요구사항	의견 (찬성/보류/반대)	비고
① 도시부터, 빈 곳부터!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RE100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는 전기요금 절감, 마을에는 소득 확대를 위한 자가용 및 마을, 아파트 전용 태양광 대상 지원 예산 3배 확대 및 분산에너지법 개정 추진 • 도로, 주차장 등 유휴부지 발굴을 통해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 및 일정 규모 이상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산업입지/집적법 개정 추진 	찬성	다만, 지원규모는 추후 논의 필요
② 폭염, 한파 등 재난 대비는 미리미리! 기후적응 인프라 대폭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화된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되는 재난약자(여성 및 취약계층 등)를 위한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공공돌봄 사회서비스 예산 확대 • 폭염과 혹한 등 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과 임금 보전, 적절한 휴게시설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관련 예산 확보 • 도시 속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을 줄이는 도시숲의 보전과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도시숲 예산 3배로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예산 확대 추진 	찬성	

<p>③ 미세먼지 줄이고 기후변화 막는!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수요관리 4.5%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이외에도 대중교통 확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시민들의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의 접근성 및 공공성 강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월 1만원 무제한 패스 도입 등 대중교통법 개정 추진 	<p>반대</p>	<p><u>패스 자체는 동의</u>하나 민주당은 성인 월5만원, 청년 월3만원, 노인 무상으로 공약을 추진 중이며, <u>월1만원 무제한 패스는 부동의</u></p>
<p>④ 찝끔찝끔 시늉만 내는 것은 그만! '에너지 복지 예산' 3배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수급 세대에 연간 34만원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차상위계층을 대상에 포함하고 및 지원 규모도 연간 5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예산을 3배 늘리고(6,800억원 → 2조원) 에너지법 개정도 추진 	<p>찬성</p>	<p>다만, 지원규모는 추후 논의 필요</p>
<p>⑤ 지역 공동체와 경제 살리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 추진 및 미래 먹거리인 해상풍력 인허가 간소화(One-Stop Shop) 특별법 제정 추진 • 주민참여 방식 확대 및 지역사회 기금, 현물 편익, 전기요금 지원 등 이익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 	<p>찬성</p>	
<p>⑥ 정의로운 전환, 지금부터 시작!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명시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은 탈석탄법 제정 추진 • 탈석탄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신속 지정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 구축하고 현행 120억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대폭 확대 	<p>찬성</p>	

<p>⑦ 농촌 인구 감소 막고 지역 활성화 위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 수입 이외 태양광 판매 수익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마을형 협동조합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 • 지역 먹거리 지키고 에너지 전환도 일구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임차농 참여 가능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p>찬성</p>	
<p>⑧ 탄소흡수원을 지키고 늘려가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면적 축소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연자원 총량제(Biodiversity offset)를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추진 • 산림 보전에 기여하는 지자체와 주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대폭 확대 	<p>찬성</p>	
<p>⑨ 재생에너지 후퇴 안돼!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보급 목표 재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 (발전량 비중 30% → 20%)로 인해 국내 태양광·풍력 시장 축소 및 사업장 폐쇄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 보급 목표 재상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혁신 특별법 제정 추진 	<p>찬성</p>	<p>전력계통혁신특별법은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할지, 기존 법령 개정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추후 검토 필요</p>
<p>⑩ 신기술 타령은 이제 그만!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30년까지 연간 에너지 효율 2배 강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국내 시장 규모는 오히려 지속 감소 중 ('13년 3,166억 → '22년 705억) •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매년 5%씩 강화하고 세계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 추진 	<p>찬성</p>	

<p>⑪ 지속가능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IRA 법안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공격적으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제정, 추진 중 •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친환경 신산업 육성 및 전. 후방 공급망 강화를 위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한국형 IRA 특별법 제정 추진 	<p>찬성</p>	
<p>⑫ 지속가능한 재정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강화 또는 탄소세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제안한 의제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유상할당 강화를 통해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위해 배출권거래법 개정 및 탄소세법 제정(중장기), 기후대응기금 예산 3배로 확대(2.4조 → 7조) 	<p>찬성</p>	<p>국제동향과 국내 산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교통에너지 환경세제 등 에너지 관련 세제를 탄소세 체계로 단계별 전환할 것을 검토</p>

[녹색정의당]

공약 의제	제안 내용 및 요구사항	의견 (찬성/보류/반대)	비고
① 도시부터, 빈 곳부터!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RE100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는 전기요금 절감, 마을에는 소득 확대를 위한 자가용 및 마을, 아파트 전용 태양광 대상 지원 예산 3배 확대 및 분산에너지법 개정 추진 • 도로, 주차장 등 유휴부지 발굴을 통해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 및 일정 규모 이상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산업입지/집적법 개정 추진 	조건부 찬성	녹색정의당은 의사결정에 대한 지역민·당사자들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전제로 태양광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임.
② 폭염, 한파 등 재난 대비는 미리미리! 기후적응 인프라 대폭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화된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되는 재난약자(여성 및 취약계층 등)를 위한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공공돌봄 사회서비스 예산 확대 • 폭염과 혹한 등 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과 임금 보전, 적절한 휴게시설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관련 예산 확보 • 도시 속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을 줄이는 도시숲의 보전과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도시숲 예산 3배로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예산 확대 추진 	찬성	
③ 미세먼지 줄이고 기후변화 막는!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수요관리 4.5%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이외에도 대중교통 확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시민들의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의 접근성 및 공공성 강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월 1만원 무제한 패스 도입 등 대중교통법 개정 	찬성	

	추진		
④ 찢끔찢끔 시늬만 내는 것은 그만! '에너지 복지 예산' 3배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수급 세대에 연간 34만원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차상위계층을 대상에 포함하고 및 지원 규모도 연간 5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예산을 3배 늘리고(6,800억원 → 2조원) 에너지법 개정도 추진 	찬성	녹색정의당의 에너지 공약의 "기후·에너지 취약 계층에 생활 필수에너지를 기본권으로 무상 보장"과 유사한 취지로 이해됨. 녹색정의당의 공약도 차상위계층을 포함하고 향후 더 확대하는 안.
⑤ 지역 공동체와 경제 살리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 추진 및 미래 먹거리인 해상풍력 인허가 간소화(One-Stop Shop) 특별법 제정 추진 • 주민참여 방식 확대 및 지역사회 기금, 현물 편익, 전기요금 지원 등 이익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 	조건부 찬성	제주도 해상풍력 발전 등 정부 주도로 기존 개발·화석연료 사업과 다른 바 없는 "약탈적 재생에너지 전환" 사례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전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임.
⑥ 정의로운 전환, 지금부터 시작!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명시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은 탈석탄법 제정 추진 • 탈석탄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신속 지정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 구축하고 현행 120억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대폭 확대 	찬성	
⑦ 농촌 인구 감소 막고 지역 활성화 위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 수입 이외 태양광 판매 수익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마을형 협동조합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 • 지역 먹거리 지키고 에너지 전환도 일구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임차농 참여 가능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조건부 찬성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전제로 태양광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임.

<p>⑧ 탄소흡수원을 지키고 늘려가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 면적 축소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연자원 총량제(Biodiversity offset)를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추진 •산림 보전에 기여하는 지자체와 주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대폭 확대 	<p>조건부 찬성</p>	<p>녹색정의당 생태 공약에 환경영향평가제 개선에 대한 공약이 있어 해당 부분은 동의하지만, 인센티브 중심의 생태계보전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p>
<p>⑨ 재생에너지 후퇴 안돼!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보급 목표 재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 (발전량 비중 30% → 20%)로 인해 국내 태양광·풍력 시장 축소 및 사업장 폐쇄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보급 목표 재상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혁신 특별법 제정 추진 	<p>조건부 찬성</p>	<p>녹색정의당 공약은 전력계통 혁신 특별법 제정의 경우 별도로 특별법을 마련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법 등 타법에서 개정하는 내용.</p>
<p>⑩ 신기술 타령은 이제 그만!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30년까지 연간 에너지 효율 2배 강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국내 시장 규모는 오히려 지속 감소 중 ('13년 3,166억 → '22년 705억)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매년 5%씩 강화하고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 추진 	<p>찬성</p>	
<p>⑪ 지속가능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IRA 법안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공격적으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제정, 추진 중 •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친환경 신산업 육성 및 전. 후방 공급망 강화를 위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한국형 IRA 특별법 제정 추진 	<p>조건부 찬성</p>	<p>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미국의 IRA와 같은 재생에너지 투자 기업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지원에 대해서는 보류 입장</p>

<p>⑫ 지속가능한 재정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강화 또는 탄소세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제안한 의제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유상할당 강화를 통해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위해 배출권거래법 개정 및 탄소세법 제정(중장기), 기후대응기금 예산 3배로 확대(2.4조 → 7조) 	<p>조건부 찬성</p>	<p>다만 녹색정의당은 배출권거래법 개정보다 강력한 탄소세 등을 통해 자원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등을 위하여 연간 50조에 가까운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p>
--	--	---------------	---

[진보당]

공약 의제	제안 내용 및 요구사항	의견 (찬성/보류/반대)	비고
<p>① 도시부터, 빈 곳부터!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RE100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는 전기요금 절감, 마을에는 소득 확대를 위한 자가용 및 마을, 아파트 전용 태양광 대상 지원 예산 3배 확대 및 분산에너지법 개정 추진 • 도로, 주차장 등 유휴부지 발굴을 통해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 및 일정 규모 이상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산업입지/집적법 개정 추진 	<p>찬성</p>	
<p>② 폭염, 한파 등 재난 대비는 미리미리! 기후적응 인프라 대폭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화된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되는 재난약자(여성 및 취약계층 등)를 위한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공공돌봄 사회서비스 예산 확대 • 폭염과 혹한 등 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과 임금 보전, 적절한 휴게시설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관련 예산 확보 • 도시 속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을 줄이는 도시숲의 보전과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도시숲 예산 3배로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예산 확대 추진 	<p>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구성하고자 함. 이를 위해 돌봄정책기본법 제정, 돌봄부 신설, 돌봄노동자기본법, 아동수당 만18세 확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돌봄자지원법 제정,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등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종합 정책을 설계함. ▶ 폭염 한파시 작업중지권 부여, 재해 발생사업장 직접고용 강제, 휴게공간 확보의무 등

<p>③ 미세먼지 줄이고 기후변화 막는!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수요관리 4.5%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이외에도 대중교통 확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시민들의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의 접근성 및 공공성 강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월 1만원 무제한 패스 도입 등 대중교통법 개정 추진 	<p>찬성</p>	<p>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약</p> <p>▶ 진보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인프라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공공교통'의 확대를 모색하고자 함. 이에 따라 찬성의견과 함께 교통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음, 청소년 무상교통을 시작으로, 무상교통과 공영화 모델을 함께 모색.</p>
<p>④ 찝끔찝끔 시늉만 내는 것은 그만! '에너지 복지 예산' 3배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수급 세대에 연간 34만원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차상위계층을 대상에 포함하고 및 지원 규모도 연간 5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예산을 3배 늘리고(6,800억원 → 2조원) 에너지법 개정도 추진 	<p>찬성</p>	<p>▶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의 중첩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음. 에너지복지의 확대는 필요함, 진보당은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수준의 에너지는 비용이 아닌 권리로서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에너지 이용권'을 도입하고자 함. 이와 함께, 최저주거기준의 강화 등의 대안 역시 마련하고 있음.</p>

<p>⑤ 지역 공동체와 경제 살리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 추진 및 미래 먹거리인 해상풍력 인허가 간소화(One-Stop Shop) 특별법 제정 추진 • 주민참여 방식 확대 및 지역사회 기금, 현물 편익, 전기요금 지원 등 이익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 	<p>반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등에서 이익공유제는 농민들의 의사와 반하여, 실제 임차농을 농지에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우리나라 농민의 70%가 임차농인 현실에서 이는 농산어촌을 대도시로 내주고, 이를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 진보당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영화된 재생에너지 확대'가 당론임. 농업과 농민의 삶도 당연히 기후위기로부터 지켜져야 함.
<p>⑥ 정의로운 전환, 지금부터 시작!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명시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은 탈석탄법 제정 추진 • 탈석탄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신속 지정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 구축하고 현행 120억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대폭 확대 	<p>찬성</p>	
<p>⑦ 농촌 인구 감소 막고 지역 활성화 위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 수입 이외 태양광 판매 수익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마을형 협동조합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 • 지역 먹거리 지키고 에너지 전환도 일구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임차농 참여 가능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p>보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수요지인 도시와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대책이 우선이며, 에너지 지역자립을 기본 당론으로

	모델 수립		하는 입장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 검토가 더 필요함. 현재 조건에서 진보당의 입장은 보류함.
⑧ 탄소흡수원을 지키고 늘려가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 면적 축소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연자원 총량제(Biodiversity offset)를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추진 •산림 보전에 기여하는 지자체와 주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대폭 확대 	찬성	
⑨ 재생에너지 후퇴 안돼!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보급 목표 재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 (발전량 비중 30% → 20%)로 인해 국내 태양광·풍력 시장 축소 및 사업장 폐쇄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보급 목표 재상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혁신 특별법 제정 추진 	일부 반대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상향은 필요하나,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는 전력민영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⑩ 신기술 타령은 이제 그만!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30년까지 연간 에너지 효율 2배 강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국내 시장 규모는 오히려 지속 감소 중 ('13년 3,166억 → '22년 705억)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매년 5%씩 강화하고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 추진 	찬성	
⑪ 지속가능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IRA 법안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공격적으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제정, 추진 중 •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친환경 신산업 육성 및 전. 후방 공급망 	부분 찬성	▶ 윤석열 정부의 재벌기업 감세 기조는 시대착오적. 오히려 법인세율 상향, 횡재세 도입 등으로 산업전환을 위한

	<p>강화를 위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한국형 IRA 특별법 제정 추진</p>		<p>재원마련이 필요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동중심 산업전환과 기후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노동자 고용보장, 기후일자리 창출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한국형 IRA를 검토할 수 있음.</p>
<p>⑫ 지속가능한 재정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강화 또는 탄소세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제안한 의제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유상할당 강화를 통해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위해 배출권거래법 개정 및 탄소세법 제정(중장기), 기후대응기금 예산 3배로 확대(2.4조 → 7조) 	<p>일부 반대</p>	<p>▶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나, 이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소득역진적이 될 수 있음. 소득세와 법인세를 확대하여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탄소배출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p>

[조국혁신당]

공약 의제	제안 내용 및 요구사항	의견 (찬성/보류/반대)	비고
① 도시부터, 빈 곳부터!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RE100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는 전기요금 절감, 마을에는 소득 확대를 위한 자가용 및 마을, 아파트 전용 태양광 대상 지원 예산 3배 확대 및 분산에너지법 개정 추진 • 도로, 주차장 등 유휴부지 발굴을 통해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 및 일정 규모 이상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산업입지/집적법 개정 추진 	찬성	내용에 동의하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
② 폭염, 한파 등 재난 대비는 미리미리! 기후적응 인프라 대폭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화된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되는 재난약자(여성 및 취약계층 등)를 위한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공공돌봄 사회서비스 예산 확대 • 폭염과 혹한 등 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과 임금 보전, 적절한 휴게시설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관련 예산 확보 • 도시 속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을 줄이는 도시숲의 보전과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도시숲 예산 3배로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예산 확대 추진 	찬성	내용에 동의하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

<p>③ 미세먼지 줄이고 기후변화 막는!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수요관리 4.5%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이외에도 대중교통 확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시민들의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의 접근성 및 공공성 강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월 1만원 무제한 패스 도입 등 대중교통법 개정 추진 	<p>찬성</p>	<p>내용에 동의하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p>
<p>④ 찝끔찝끔 시늉만 내는 것은 그만! '에너지 복지 예산' 3배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수급 세대에 연간 34만원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차상위계층을 대상에 포함하고 및 지원 규모도 연간 5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예산을 3배 늘리고(6,800억원 → 2조원) 에너지법 개정도 추진 	<p>찬성</p>	<p>내용에 동의하고 예산규모와 집행시기에 대해 구체적 논의와 필요</p>
<p>⑤ 지역 공동체와 경제 살리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 추진 및 미래 먹거리인 해상풍력 인허가 간소화(One-Stop Shop) 특별법 제정 추진 • 주민참여 방식 확대 및 지역사회 기금, 현물 편익, 전기요금 지원 등 이익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 	<p>찬성</p>	
<p>⑥ 정의로운 전환, 지금부터 시작!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명시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은 탈석탄법 제정 추진 • 탈석탄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신속 지정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 구축하고 현행 120억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대폭 확대 	<p>찬성</p>	<p>석탄발전소 폐쇄 시점과 구체적 계획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 필요</p>

<p>⑦ 농촌 인구 감소 막고 지역 활성화 위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 수입 이외 태양광 판매 수익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마을형 협동조합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 • 지역 먹거리 지키고 에너지 전환도 일구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임차농 참여 가능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p>찬성</p>	
<p>⑧ 탄소흡수원을 지키고 늘려가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면적 축소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연자원 총량제(Biodiversity offset)를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추진 • 산림 보전에 기여하는 지자체와 주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대폭 확대 	<p>찬성</p>	
<p>⑨ 재생에너지 후퇴 안돼!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보급 목표 재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 (발전량 비중 30% → 20%)로 인해 국내 태양광·풍력 시장 축소 및 사업장 폐쇄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 보급 목표 재상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혁신 특별법 제정 추진 	<p>찬성</p>	
<p>⑩ 신기술 타령은 이제 그만!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30년까지 연간 에너지 효율 2배 강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국내 시장 규모는 오히려 지속 감소 중 ('13년 3,166억 → '22년 705억) •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매년 5%씩 강화하고 세계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 추진 	<p>찬성</p>	

<p>⑪ 지속가능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IRA 법안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공격적으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제정, 추진 중 •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친환경 신산업 육성 및 전. 후방 공급망 강화를 위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한국형 IRA 특별법 제정 추진 	<p>찬성</p>	
<p>⑫ 지속가능한 재정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강화 또는 탄소세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제안한 의제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유상할당 강화를 통해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위해 배출권거래법 개정 및 탄소세법 제정(중장기), 기후대응기금 예산 3배로 확대(2.4조 → 7조) 	<p>찬성</p>	<p>내용에 동의하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p>